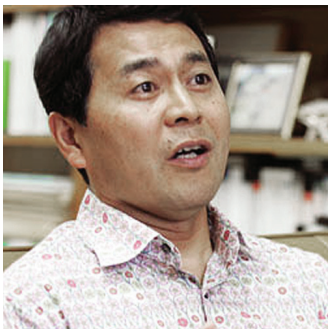


전쟁은 실패했다 점령을 끝내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파병 한국군 철수/이란 공격 반대



이희수 교수는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중동과 이슬람 관련 전문가로 현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맛불> 김용민 기자가 최근 한 달간 이란을 방문(9번째 방문)하고 돌아온 이희수 교수를 만나 미국의 이란 위협의 배경과 전망을 물었다.

최근, 특히 부시의 미군 증파 방침 발표 이후 미국 정부가 이란을 거세게 비난하고 위협도 강화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군사주의를 행사하는 이유는 걸프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천연가스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고도의 전략에서 비롯합니다.

이미 걸프해의 석유는 미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카스피해 연안의 천연가스 유전 지대까지 미국이 갖게 된다면 전 세계가 한 50년 이상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동의 걸프 지역과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전략적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이란이거든요. 다시 말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짜놓은 이른바 '대(大) 중동 전략'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이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라크 전쟁 이후 시리아와 이란이 다음 목표가 될 거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미국이 이란 공격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냐?

우선 이것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에 대한 세계 여론의 비난을 이란 문제로 돌리려는, 즉 외교 정책 실패를 둘러싼 논란을 회피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교묘한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라크 전쟁 실패 이후에 가장 덕을 많이 보고 중동

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게 이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라크 내에 안정적인 친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란을 견제해 두지 않으면 미국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인 침략 전쟁의 성과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라크는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 [이란과 같은] 시아파이고, 이라크 총리를 비롯해 정부 내 시아파 실세들 거의 대부분이 이란

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근본적으로 친(親)이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정부 인사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과감하게 잘라놓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실패한 뒤 이란과 이라크 정권이 연계되는, 한마디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쁜 반미 [연대]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5면으로 이어짐



이라크 침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시간: 3월 1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집회 후 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http://www.antiwar.or.kr



중동의 위기와
3·17 반전행동

-누가 이라크 종파 갈등을 부추기는가?

-한국군 파병과

아르빌 원유개발권

1, 5, 6,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라크 전쟁 4년

6~7면

일본의
맑스주의 활동가들에게
듣는다

-위안부, 총련 탄압,
독도, 교과서 왜곡 등

8, 9면

2·13 합의 이후 한반도

4면

한미FTA 저지 투쟁의 과제

12면

<맛불> 온라인 기사

www.counterfire.or.kr

미국 민주당의
이라크 참군안은 기만이다
민주당의 이라크 '참군안'은 부시의 '증파' 계획을 추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반전운동은 민주당에 어떤 기대도 갖지 말고 굳건히 대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보고
2007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의원들이 참가해 제도 개선안과 당헌 개정안, 사업평가 등을 논의한 당대회의 주요 내용을 보고한다

진보정치연구소 부패 추문

금속노조 강기지의
원·하청 연대 투쟁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차별 해소 토론회 보고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대중에게 고통을 안겨줄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 총결기 | 3월 25일(일) 서울 도심



인용해도 될까요?

“이번 회담으로 김정일 체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결국 대북 비핵화 외교가 실패하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 북미대화를 저주하는 네오콘 존 볼턴

“[노무현에게 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뺨 때리는 격”

－ 뻔뻔스러운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김근태: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와 김근태의 대타협이 비슷하다. 앞으로 한국노총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박근혜: “이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보기 좋다. 바로 이런 것이다’는 생각을 했었다. 평화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했었다.”

－ 한국노총 이용득에게 아부하는 대선 주자들

“개헌 추진을 철회하면 웃기는 사람이 된다.”

－ 노무현의 딜레마

“한미FTA는 [내가 청와대를] 나온 뒤에 나왔는데, 저도 사실 놀랐다. ... 적어도 내가 그만둔 2005년 8월까지의 정책회의에 올라온 적이 없었다.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

“이런 공돌이 같은 새끼들아”, “이 개××들아, 넌 무조건 맞아야 해”

－ 3월 7일 금속노조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평택경찰서 강력계 사복경찰들

여성 노동자에게 짐승같은 탄압을 자행한 정몽준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울산과학대학(이사장 정몽준)은 미화원 여성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짓밟았다. 알몸으로 저항하던 50대 여성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에 손톱이 뜯기고 머리카락이 뽑히며 강제로 농성장에서 끌려나와 실신했다. 노동자들은 “우리를 노예 부리듯 하더니 이렇게 짐승처럼 대할 줄은 몰랐다”며 피맺힌 절규를 토했다.

지난달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집단 해고당한 이 노동자들은 2월 26일부터 본관 지하 탈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 측은 전기와 수도를 끊어 노동자들을 암흑과 추위에 떨게 한 것도 모자라 호시탐탐 농성장 침탈을 노려왔다.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온 정몽준은 급기야 졸업식이 있던 지난달 15일에는 ‘행사 방해가 예상된다’며 노동자들을 농성장에 감금했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저항을 계속하자, 대학 측은 비열하게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에는 교직원 50여 명이 농성장에 몰려들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 이들은 “또 벗어봐라. 내가 벗을까? 같이 벗어볼래?”라며 성희롱까지 했다. 심지어 식사 중인 여성 노동자들의 식탁을 발로 걷어차는 강패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과학대노조 지도부는 투쟁을 비난하는 배신적 성명을 발표해 자신들이 민주노조가 아니라 정몽준의 하수인임을 입증했다.

배은망덕한 우파 총학생회는 4백여 명의 학생들을 동원해 “민주노총은 물러가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 구사대는 맨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끌어냈다

시위를 벌였고, 투쟁 지지 서명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명하면 쫓린다”고 협박까지 했다. 정몽준과 어떤 유착관계인지 의심스러운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매우 단호히 맞서고 있다. 이순자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은 “정문 앞에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다. (우리는) 거기에 묻힐 각오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지와 연대도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미포조선노조, KCC 등 울산지역의 노동조합들이 규탄 집회와 정몽준

사무실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순영 의원 등도 사업장을 방문해 지지·연대를 발표했다.

따라서 울산과학대노조 지도부와 총학생회의 배신적 행태에 비판적인 울산과학대 노동자와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처럼, 사태의 근본 책임은 이사장 정몽준에게 있다. 정몽준은 범죄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박설

〈연합뉴스〉 기자라고 사기친 〈조선일보〉

“대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당국뿐 아니라 〈조선일보〉의 심기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학생운동가들을 취재해 어떻게든 인권위 권고에 흠집을 내려 했던 듯하다.

처음에 〈조선일보〉 기자는 전화로 〈연합뉴스〉를 사칭해 나에게 인권위 권고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대학생 다함께’의 서범진 동지(고려대 출교자)를 연결해줬다.

그런데 서범진 동지는 이 기자와 전화 인터

뷰를 한 뒤 매우 불쾌해했다. 왜냐하면 그 기자가 인권위 권고와는 상관 없는 ‘대학생 다함께’의 규모·분포 등을 주로 질문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범진 동지한테서 이런 상황을 듣고 〈연합뉴스〉 기자인 선배에게 전화해 기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선배의 도움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 기자가 〈조선일보〉 사회부 수습기자란 것이었다! 진보단체의 인터뷰 거부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어온 〈조선일보〉가 꼼수를 부린 것이다.(수습기자가 감히 이런 신분 사칭을 할 수 있는 건 ‘테스크’가 그렇게 교육시키기 때

문일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나는 〈연합뉴스〉를 사칭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조선일보〉 사회부에 직접 전화해서 이 기자가 나에게 사과하게 만들었다. 또,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곧바로 나는 〈미디어 오늘〉과 〈민중의 소리〉에 이 황당한 경험을 제보했고, 두 언론 모두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기자인 선배는, 〈조선일보〉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것은 기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했다.

조명훈



개강맞이 토론회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고려대학교의 불허 조치를 뚫고 성황리에 개최되다

3월 10~11일 이틀 동안 ‘대학생 다함께’가 주최한 개강맞이 강연회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는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고려대 당국이 강연을 불허하고 강연장 전기를 차단하는 등 탄압했음에도 무려 6백 명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하고 참가했다.

연사들은 진보적 관점에서 전쟁과 신자

유주의가 놓고 있는 여러 모순에 대해 비판했다. 전쟁, FTA, 신자유주의와 대학, 비정규직, 지구온난화 등 모든 주제의 강연이 매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청중들의 자유토론에서도 발언과 질문이 쇄도했다. 특히,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편, 고려대 당국은 학내 단체가 주최하

는 출교 문제를 다룰 홍세화 씨의 강연회도 추가로 불허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교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허용할 수 없다”며 진중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강연회의 성공적 개최를 디딤돌 삼아, 학생들의 진보적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고려대 당국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상권

민주노동당이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충분히 개방적인 태도로 선거연합에 참여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주장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거나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연재했다.

또,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다함께’가 개최한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선거연합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후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공동의 대선강령을 모아내고 합의할 수 있는 진보진영 내 세력들의 정치연합, 선거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노동자의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도 민주노동당이 “과감하게 방식을 연다고 하면, 대의 속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도 “진보대연합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물론 광범한 공감대와는 별도로 연합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의 방법도 논란거리다.

진정한 진보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이나 열우당[과 그 후신·변형 세력]과 분리되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지금중 미래구상 사무처장은 “개혁세력 중에 반신자유주의 기준에 동의하고 실천하겠다는 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열우당과 그 계승 정당들은 진보와 관계가 없다.

열우당 개혁파로 분류되는 천정배만 봐도 이 기준에 미달한다. 그는 최근 <한겨레> 기고에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받아들이되, 부정적인 측면을 보

완[하자]”며 사회적 자유주의 정치인임을 드러냈다. 천정배는 원내 대표 시절 파병 연장에 앞장섰던 장본인이다.

진보의 범위

그런데 지금중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양적 유연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구상은 또, 선거연합에 참가할 세력의 또 다른 기준으로 ‘평화 공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 반대’는 연합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평화 공존’ 세력과 전쟁 세력을 나누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이지만 이라크 전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에서의 기준만 적용해도 기존 열우당 의원들 중 임종인 의원만이 간신히 턱걸이를 할 정도다.

반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체제와 모델에 합의할 경우에만”(한국사회당 금민

대표) 진보대연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거연합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강령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적대 계급 간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좀더 광범한 진보 세력을 결집하려면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정도로 동의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은 “시민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며 NGO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일부 시민운동단체와 그 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거나 노무현 정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미FTA·파병 문제 등에서 주요 NGO들이 대중 정서의 급진화를 대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FTA범국민본에서 NGO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을 주류 정당들에서 독립한 선거연합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시민단체에 우호적이면서도 급진적 대안을 갈구하는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의 방법

또 다른 논점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연합을 이룰까 하는 점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종권 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후보를 먼저 혹은 동시에 정한다면 이는 진지한

선거연합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가 단연 중요함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다음 단계의 과제로 미루거나, 잠재적 동맹자들의 의구심을 사면서 다른 과제와 병행해 추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당장에 ‘한국사회당’이나 ‘노동자의힘’ 같은 좌파 단체들이 민주노동당의 충분한 개방성을 조건으로 선거연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독자 후보의 우선적 선출은 이들에게 참여를 기피할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진보진영의 여러 세력들이 각각 자신들의 후보를 먼저 정한 후에 후보를 단일화하려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금중 사무처장이 말하는 “협상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며 “진보진영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연석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방법과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노력이 각 단체의 후보 선출보다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배려해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만나”지 않으면 “‘패권주의’같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조직 아닌가”라는 지금중 사무처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진보진영 안에 선거연합의 기준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지만 훨씬 커다란 공통점과 광범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행보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제를 소홀히 하기엔 진보진영 전체와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기회와 역사적 책임이 너무 크다.

장호중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한규한

지난 3월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심지어 “북미 수교 가능성은 99.999...퍼센트”(〈자주민보〉)라는 성급한 논평도 나왔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 핵 위기 심화를 당분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을 때보다 부시의 처지가 여러모로 나빠져서다. 이라크 전쟁은 늪에 빠졌고, 이 틈을 타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미국 지배계급 일부는 부시의 대외정책을 비난한다. 동북아에서 미국 패권도 그 때만 못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에서 미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사실이다.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파탄으로 몰고갔던 BDA(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 여부 문제도 방식이 어찌되든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크리스토퍼 힐은 “북미 양측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그러나 이번 회의는 2·13 합의의 진전된 측면을 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불확실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일단 덮으려 했지만 여전히 불씨로 이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크리스토퍼 힐은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규명해 전모를 알아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나아가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기술 거래를 해” 온 것이 “정말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테러지원국 해제도 불투명하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테러지원국 해제의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 지배계급 사이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한 경수로 문제에 서도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들어오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수교 문제도 2·13합의 수준에서 논의됐다. 물론 “핵 폐기가 전제”된 것이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다. 크리스토퍼 힐은 이번 회의가 끝난 후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으로, 북한과 언제나 갈등을 빚어 온 문제다.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가 파탄났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북미 수교를 낙관한다. 과거와 달리 2·13합의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대결적 자세로 회귀할 수 없도록 구조화”(〈진보정치〉 313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6자회담이 처음 시작될 때도 나왔던 것이다.

제네바 기본합의와 북미공동코뮤니케 파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미 수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원래 미국이 북한 핵을 문제 삼은 이유가 북한 핵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묶어둘 빌미로 북한 핵을 이용해 왔다. 그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에 나서지도 않는 ‘현상 유지’를 추구해 왔다.

북한 관료도 미국의 북한 핵 정책이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 회의에서 김계관은 “중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자주계열 활동가들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핵시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북한이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 미국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란을 손봐줘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게는 현재로서는 북한보다 중동이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자원인 석유 산출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미국 제국주의의 흥배와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그리고 영국·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중동을 지배했던 열강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진 틈을 타 독일·중국·러시아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뛰어 들었다.

2003년 미국이 6자회담을 시작한 이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자신의 존재가 미국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은근히 몸값을 과시한 것이다.

설령 북한이 핵 시설·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해도 핵무기 폐기와 국교 정상화·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전혀 별개 문제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핵무기 폐기 전 관계정상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 동아시아 열강들은 이를 미국 패권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정상화 없는 핵무기 폐기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체제 보장(관계정상화) 자체가 자동으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한다는 주장

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과제가 평화협정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못박아 놓았다. 미국은 군대 철수는커녕 주한·주일 미군 재편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일본·중국, 심지어 한국도 모두 제국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비경쟁에 열을 올린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사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세계 체제 편입이지 변혁이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주요 열강들의 군비경쟁 폐지·핵무기 폐지·주한미군 철수 같은 과제는 오직 제국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으로만 실현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 실현에 진정 중요한 것

유가 바로 이라크 침략을 준비하며 북한을 묶어두려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재개한 목적도 중동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2·13 합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여 줬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얻은 외교적 여유 이상으로 이란은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13합의가 북한의 선군정치 때문이고 “미국은 이제 제3세계 나라들과 전쟁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제국주의는 영영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지게 된다”(〈자주민보〉)는 것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미국 제국주의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 저항을 경시하게 만든다.

제국주의를 북미관계로만 협소하게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동북아 평화가 이미 결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중운동이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을 방해하는 수구 냉전 세력의 준동

만 견제하면 된다는 실천적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올해 대선에서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와도 관련 있다. 가령 민경우 한미 FTA저지법국본 정책기획팀장은 ‘민주노동당 중심’을 말하면서도 천정배의 ‘민생정치 그룹’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정 세력”에 포함한다.

또, 민경우 동지는 2005년 “김정일-정동영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놓”은 것과 같은 지배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 되면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 등에 맞선 반전 운동 건설에 미온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맛볼〉 32호에서 김하영 동지가 지적했듯이, 2·13합의의 미래는 상당 부분 중동 정세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파병 한국군 철수와 미국의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서도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란은 중동 지역 패권을 위한 미국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 1면에서 이어짐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란 문제가 북핵 문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부시 행정부 자신도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 분수령이라고 보는데요. 부시가 이란 핵문제를 북핵 문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독일은 미국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을 경제봉쇄에서 풀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산을 푼다든지 하는, 북한과 한 거래와 비슷한 패키지를 제안해 놓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결국 이란의 협조 없이는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 문제는 사정이 아주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이란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자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압력에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보다는 이란이 훨씬 다루기 어려운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란도 1979년 혁명 이후 30년 가까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당해 왔고, [이 때문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실업률은 30~4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 정권, 특히 올레마[시아파 성직자 또는

종교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권력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대미 항쟁이라는 명분만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형편이 됐죠. 이란 자체도 내부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란 정권이 미국과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이란과 미국 양쪽의 요구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의 얘기고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미국이 전 세계의 반대와 경고를 무릅쓰고 이라크를 공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 공격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문제인 게 분명합니다. 네오콘이나 강경파들이 언제나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의 핵 시설들은 주로 이란 남부의 문화유산과 대도시 거주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약 이란 공습이 현실이 될 경우, 미국이야 핵 시설에 대한 표적 공습이라고 우기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 목격했듯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자 이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이스파한 부근에 핵 시설이 있는데, 만약 이 곳을 폭격할 경우 그것은 곧 인류 전체의 문명을 폭격하는 것과 다를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란의 핵 시설이 남쪽의 걸프해 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걸프해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매우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위치한 쿠르드 지역이 심각한 불안정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란도 즉시 이라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이 곧바로 이라크의 시아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인 쿠르드 지역에 우리 자이툰 부대를 보낸 데에는 결국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군이 이란 견제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걸프 해역에서 이란 공격을 준비 중인 미군은 식의 전략적 계산도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와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군이 쿠르드 민병대를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이란 공격 시 이란의 이라크 개입에 대한 대비, 또는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에 이란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위한 준비, 뭐 이런 걸로 봐야겠죠.

오는 3월 17일 이라크 점령 종식, 이란 공격 반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한국군 완전 철수 등을 내걸고 서울역에서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립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에 성공한다면 인류사회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당연히 전 세계는 더 오랫동안 미국의 손아귀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란 위협 문제는 우리와 상관 없는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르빌 석유 개발 참여

제국주의 점령의 피문은 떡고물

3월 8일 산업자원부는 한국 정부와 SK, GS칼텍스 등 석유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말 이라크 쿠르드 지역을 방문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원유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고(故) 윤장호 하사의 영결식이 치러진 뒤 3일 만에 나온 이번 발표의 노림수는 뻔하다. 윤 하사의 죽음으로 고조된 철군 여론을 ‘국익’ 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해 무마하려는 것이다. 윤 하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주류 언론들은 정부의 이런 꿈수에 적극 호응했다. 주류 언론은 “아르빌의 건설 붐”이나 “제2의 ‘중동 특수’”(〈조선일보〉) 소식을 전하느라 열심이다. 윤 하사

의 죽음 따윈 잊고 우리 기업들이 잡은 돈 벌이 기회에나 기뻐하라는 식이다.

이른바 ‘국익론’은 정부가 처음 이라크 파병을 추진할 때부터 파병 지지자들의 핵심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고, 그 뒤에도 파병 지속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반복돼 왔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그러한 장밋빛 전망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러저러한 약속은 많았지만 실제로 진척된 사업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지금 쿠르드 지역 상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쿠르드 지역 내에서도 자살폭탄 공격이 급증했고, 심지어 주요 유전 지대인 키르쿠크의 통제권과 쿠르드족의 독립 가능성을 둘러싸고 터키나 이란의

군사 개입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지금 키르쿠크에서는 쿠르드족 주도의 ‘저강도 인종청소’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종족간 갈등은 자이툰 주둔지인 아르빌 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지금 쿠르드 자치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원유 개발 사업 등에 참가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 고조 때문이다.

부패한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터키나 이란의 군사 개입이나 종파간 폭력의 확대 가능성에 직면해, 잘 무장한 외국군이 자신의 땅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르빌 주지사는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을 해 온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철군한다면 주지사로서 당연히

계속 주둔해 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지배자들도 바라는 일이다. 최근 〈조선일보〉는 “성급한 철군보다 단계적인 감군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래야만 아르빌 지역에 최소한의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며 파병 연장을 바라는 지배자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자이툰 파병은 결코 ‘이라크인들을 위한 평화·재건 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면서 제 나름의 국제적 지위 상승과 실리도 챙기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거짓 명분일 뿐이다.

65만 명을 학살한 제국주의 점령에 동참한 대가로 피문은 떡고물을 챙기고도 “남는 장사”라며 으스대는 이 비인간적이고 뻔뻔스런 정부에 맞서 3월 17일 서울역 광장에 모이자.

김용민

이라크 전쟁 4년

상처입은 야수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년 전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정복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천하무적처럼 보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순식간에 — 2001년 9·11 이후 겨우 두 달 만에 — 전복했을 때, 미국의 세계 지배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바로 이것이 공화당 내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이라크 침략을 주장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즉, 신보수주의자인 찰스 크로세머가 “일시적 일극 체제”라고 부른 것을 영속화하려는 것이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계산은 이랬다. 이라크를 차지하면, 냉전 해체 뒤 미국이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세계를 지배한 역사적 상황이 영속화할 것이다. 이라크를 지배하면, 중동을 지배하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확고해질 것이다.

이것의 함의는 중동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급진적 지리학자 데이빗 하비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중동을 확고히 지배하면 유럽 연합·일본·중국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중동 석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석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을 것이다.

더 거칠게 말하면, 감히 어느 누구도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에서 그럴 것이다. 미국의 정보 자문 기업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눈에 띄는 군사적 승리가 필요했다. 그것은 피에 굶주렸기 때문도 아니고 모종의 카우보이 기질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였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신뢰성은 어디에 있는가? 부시 1기 정부에서 국무부 고위 관리를 지냈고 지금은 유력 단체인 ‘외교협회’의 의장인 리처드 하스는 지난해 10월 이렇게 썼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에

가져다 준 온갖 고통과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제2의 수퍼파워”를

구축하는 데

다시 헌신할

이유가 될 것이다

“중동에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유럽식 중동, 즉 평화롭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중동을 만든다는 구상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도 해롭고 전 세계에도 엄청난 해를 끼칠 새 중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주된 이유는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이라크 정복 실패다. 미군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속전속결식 전쟁으로 몇 주 만에 이라크 군대를 이겼지만, 점령에 반대하는 대다수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직면해서는 대체로 무능력했다.

과거의 식민 점령군들이 그랬듯이, 미군은 반란 진압의 근본 법칙 앞에 무너졌다. 그 법칙이란, 게릴라들을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이라크 점령 세력은 이런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 무장 저항세력의 주요 기반은 주로 이라크 중부의 수니파 무슬림 거주 지역이었다.

그러나 점령이 시작된 지 채 몇 달이 안 돼 다수파인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들을 비롯한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미군과 그 동맹군이 이라크를 떠나기를 원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전례를 따라 이간질시켜 각계각파하기를 실행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상층에서는 시아파 지도자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한편, 기층에서는 내무부 등에 파리를 튼 종파적 살인 특공대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다.

저항

그러나 2006년 2월 사마라의 시아파 황금 돛 사원 폭파 사건 이후, 이웃 지역에서 종파가 다른 사람들을 청소하기 위한 종파간 살상의 악순환이 견잡을 수 없이 격화했다. 특히 광역 바그다드 지역에서 그랬다.

한편,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자 중동 지역의 세력 저울이 이란에 유리해졌다.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가 발리 나스르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이란을 분쇄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군대 — 옛 이라크 군대 — 를 미국이 파괴해 버렸다.”

이런 지정학적 현실에 더해,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공화주의 정권이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에게 미치는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을 추가로 언급해야 한다.

이 포괄적인 실패 때문에 미국 권력에 대한 세계인들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라크 재앙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겹쳤기 때문에, 지금 논쟁가들은 쇠퇴하는 미국이 “과잉 확장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묘사한다.

이라크 재앙에 더해 처음에 전쟁을 정당화

하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들이 폭로되자, 블레어가 총리직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 부시는 레임덕이 돼버렸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베이커와 해밀턴이 대표하는 — 옮긴이]이 ‘이라크 스타디 그룹’ 보고서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이란과 그 동맹국인 시리아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제안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늘 그랬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이 정부 내의 정치적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새 사령관 데이빗 페트류스는 미군 ‘증파’를 공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바그다드와 안바르 주(州)의 주요 전투 지역에 적어도 5개 전투 여단을 추가 투입하고, 철통같이 요새화한 대규모 기지들에서 미군들을 빼내 인근 접전 지역의 소규모 기지들로 이동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지난 주말[3월 10일]에 부시는 4천7백 명을 추가로 ‘증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2월 14일의 새 정책 시행 이후 폭력 사건 전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미군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그들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월과 5월까지 “반군과 민병대들은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고 취약 지점이 어디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올 여름이 [이라크 점

령] 작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라크 반군 문제에 대해 미군 고위 간부들에게 조언하는 예비역 해병 대령인 게리 앤더슨은 미군 철수에 대해 경고하며, 수니파 반군과 시아파 민병대들은 ‘미군이 떠나기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라크 보안군을 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점령에 가장 일관되게 반대한 시아파 민병대인 마흐디 군 지도자인 무크다다 알 사드르는 바그다드 사드르시티의 마흐디 군 근거지에 들어오는 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듯하다.

그러나 수니파 저항세력은 미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서, 1월 말 이후 적어도 6대의 미군 헬기를 격추시켰다. 그 저항세력 가운데 일부는 지난주에

성지 케르발라 순례에 참가한 시아파 무슬림들을 살해한 일련의 종파적 폭력에도 가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혼란과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짓을 이란으로 확산하겠다는 부시 정부의 위협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 부통령 딕 체니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자세한 이란 공격 계획을 베테랑 탐사 전문 기자 시모어 허시가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란과 시리아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항하기 위해 수니파 정권들과 운동들 —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거나 동조하는 급진파들을 비롯한 — 의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더 ‘실용적’인 외교 정책으로 변화하는 기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란을 포함해 중동 각국이 참가한 지난 주말 바그다드 회담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미국의 ‘실용파들’이 승리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난주 〈가디언〉에서 노움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야수는 부상당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어떻게든 궁지를 벗어나라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정부가 훨씬 더 큰 재앙을 기꺼이 무릅쓸 수도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여전히 경계해야 하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이란 공격 반대를 위한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수퍼파워”

지금까지 반전 운동이 정점에 이른 것은 2003년 2월 15일이었다. 그 날 전 세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전 시위를 보고 〈뉴욕 타임스〉는 “제2의 수퍼파워”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침략 4년을 맞아 비슷한 규모의 시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시위 규모 때문이 아니다. 지난 1월 워싱턴 반전 시위와 몇 주 전 런던 반전 시위는 어느 모로 보나 대규모 시위였다.

오히려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 이후 전국적 반전 연합체들이 대거 운동을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 연합체들의 많은 수, 특히 유럽 대륙의 연합체들이 냉전기 핵무기 반대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들은 ‘이슬람-파시즘’에 맞서 싸운다고 주장하며 발호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무장이 부족했다.

정치적 동맹이 때로는 부정적 구실을 했다. 미국의 반전 운동가들은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전정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 존 케리를 지지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바람에 엄청난 방향감각 상실에 빠졌다.

유럽 최대의 반전 운동인 이탈리아 운동은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정부를 지지하느라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프로디 정부가 이탈리아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동참을 강력히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실패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불가피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제국주의의 장기적인 공세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9·11 이후 전쟁저지연합이 창설됐다. 이런 인식이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를 지행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전쟁저지연합은 또, 제국주의의 공세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점에서 영국 반전 운동가들은 옳았음이 입증됐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에 가져다 준 온갖 고통과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제2의 수퍼파워”를 구축하는 데 다시 헌신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라크 내무부 소속 특수 경찰들
미군으로부터 훈련과 지원을 받으며
종파적 살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제국이 부추긴 이라크 종파주의

앤 알렉산더

시장에서의 폭탄공격, 살인 특공대, 사원 습격 등 유혈낭자한 종파간 폭력은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과 아랍족·

2003년과 2004년 내내 진정한 권력은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미국 관리들에게 있었다. 반면, 허울뿐인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와 수니파 가운데 누가 내무부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내분에 휩싸였다.

점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비록 격이 단 한 건이었다. 2004년에는 4건, 2005년에는 5건, 2006년에는 6건이었다. 올해는 1월에만 네 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고, 그 때마다 70명, 88명, 73명, 1백37명이 죽었다.

이러한 참사들은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폭탄 과한이 자행한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반목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점령 지지자들은 이런 해묵은 원한 관계를 풀기 위해 미·영 점령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라크의 문제는 점령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인들 사이의 분열과 그들 자신의 잔인한 폭력성 때문이라는 위험천만한 신화를 퍼뜨린다.

그들은 미·영 점령군이 저지르는 학살은 정당할 뿐 아니라 혼란을 막는 방법만 그것뿐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진실은 점령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라크의 정치 체제를 붕괴시켰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종파간 폭력이 분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점령의 ‘민영화’가 계속됐다. 지금 이라크에는 적어도 4만 8천 명의 “용병”뿐 아니라 미군의 지휘를 받는 비밀 민병대가 6개 정도 있다.

지금 이라크의 종파간 폭력을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 점령의 논리다. 그것은 국민 대다수가 점령군 주둔에 반대하는 나라를 지배하려고 미·영 관리들이 애쓴 결과다.

그들의 정책은 고전적 식민주의 전략이었다. 즉, 침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자 자신들과 협력할 소수 토착 특권층을 골라 군사력으로 지원하고, 만약에 같으면 분출하면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뻘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엄청난 사망자 수는 미·영 점령군이 직접 저지른 것이거나 [그들의] 점령 [정책]이 부추긴 분열의 결과다.

점령 세력은 의도적으로 종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건들을 조성해 왔다.

점령군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라크에는 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비(非)종파적 운동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이 글의 전문은 〈맛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아베 망언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대학생 ‘다함께’는 올해 초, 일본의 급진 좌파 활동가들을 만나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사회운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반전 단체 ‘SAY-PEACE-PROJECT’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과 일본의 주요 현안 쟁점들에 대해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저항 세력’이 당에 복귀한 것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고이즈미 정권은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지방 보수층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현 총리 아베는 지방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이즈미 정권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켰지만 아베는 일본 재계의 압력 때문에 신사 참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규제 철폐 같은 노동 정책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일제 시대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국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가 이런 말을 한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시장을 중요시하는 일본 자본은 일본 정부가 고노·무라야마 담화에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국제 문제로 비화된 아베의 발언을 싫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베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거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의 반영일 것입니다.

아베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며, 그의 정치 기반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한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이었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2000년에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직전 방송사 NHK의 간부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 변경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성명 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후 보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개인들의 항의 메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은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아시아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막는 것으로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양심적인 일본 좌파가 문제 삼지 않는 일반적인 일본 교과서에도 과거 식민지 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설명은 양과 질

모두에서 지극히 불충분했고 1990년대 들어서야 간신히 개선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고노 담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라고 기재된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불충분한 기술조차 현재 삭제되고 있습니다. 우익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는 2001년과 2005년에 거의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른 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는 부수 효과를 낳았습니다.

우파의 시도에 반대하고 패전 후 양심적 일본인의 역사관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나 독도 문제 등 주변국과 영토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요?

두 문제는 1990년대부터 일본 정치인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슈화했다고 봅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조선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문제를 일본이 계속 회피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본래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영토란 주권에 의해 지배하는 것으로 국가가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사회 모순을 배외주의로 돌리기 위해 독도를 거론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일본 좌파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후 보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영토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들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천대하는 노무현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려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후원자이기도 한 미국 하원까지 찾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 마디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친일파 처단을 방해했다. 그래서 친일파는 남한 지배계급의 주류가 됐다.

1965년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위안부’ 등 일제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미꾸라지처럼 피해 갈 수 있었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 우익들의 망

언이 터져 나올 때마다 여론 무마용으로 ‘규탄 쇼’를 해 왔지만 그 때뿐이다.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2005년에 들어서다. 이마저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절한 항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2005년 엠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협상에 나서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전쟁기업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에 대해 정당한 법적 심판을 내려 달라고 소송을 내자 한국 사법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 만료”와

일본 좌파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취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많은 평화 운동 단체·개인이 핵실험을 비판했습니다. 주류는 ‘유일한 피폭 국가’로서 북한의 핵실험을 허락할 수 없다는 논조이고 일본과 미국이 가하는 대북 압박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일부 좌파는 미국이나 일본도 비판하지만 ‘테러도 전쟁도 반대’한다는 식의 양비론을 취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반도 분단의 조건이 됐으며, 패전 후에도 일·미 동맹에 의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경직화시켰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일본 좌파 내에서는 극히 소수입니다.

일본의 반전 운동을 소개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강력하다고 알려진 일본의 평화 운동은 1990년대 옛 사회당 블록의 붕괴 등과 함께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또, 젊은층을 거의 조직하지 못해 현재 일본의 평화 운동은 주로 40대 이상의 세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кина와를 제외하면 일본의 평화 운동은 대체로 체제 내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일국 평화주의’적인 호헌론이 주되고 일본이 가해국이라는 인식이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중심으로 한 ‘전쟁 국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평화 운동의 과제는 젊은층에게 적합한 형태의 운동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정도 그런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 왔고 현재는 작년 말 교육기본법 개정 투쟁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평화 운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번역 최미선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난해 노무현은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일본 지배자들과의 관계가 ‘과거사’ 파위의 ‘하찮은 일’로 파탄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미 그들은 이라크파병 등 침략 전쟁의 동맹이다.

한일 관계의 다른 주요 쟁점들(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교과서 개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도 특히 일본의 반제국주의와 반전 운동 세력이 대중적 항의로써 간여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한규한

일본 정부의 총련 탄압 반대한다

김송(재일조선인 맑스주의자)

해방 후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국적을 불문하고 민족을 총칭)을 치안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으로 감시·관리해 왔다. 또, 민족 운동도 탄압해왔다. 해방 직후를 제외하면, 최근 약 1년 동안 일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총련 본부 4곳, 총련 지부 2곳, 상공회 5곳, 학교 1곳, 단체 1곳, 가택 39곳을 수사해 총련 전임자와 동포 13명을 체포했다.

특히 올해 들어 탄압이 더 심해졌다. 1월 28일 경찰은 ‘전자적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를 핑계로 민족 교육의 장인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난입했다. 2월 6일에는 ‘세무사법 위반’을 구실로 총련 효고현 본부와 효고현 상공회 등을 6백 명의 수사관과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 수색했다.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인 2월 14일에도 또다시 홋카이도 상공회를 강제 수사했다.

또 언론을 동원해 총련을 비난하려 한다. 탄압에 항의한 동포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에 고통받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총련 탄압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밀접하게 결합돼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훈련 직후 일본 정부는 9개 항목의 대항 조치를 발표하고 준(準)전시법 성격을 갖는 ‘특정선박입항 금지법’을 발동해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조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 학생이 7백96명, 비행기로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된 학생이 5백31명이나 된다.

그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조선’적(籍)을 가진 재일조선인 동포의 재입국을 규제했다.(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1952년 일본 정부는 그 때까지 일본국적자였던 옛 식민지 출신자를 무국적 상태로 추방했고, 외국인등록령을 법률에 인계해 현재도 ‘조선’적(籍)을 가진 사람이 계속 태어난다. 생존·거주·이동 등의 자유를 부정했기 때문에 재입국도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2005년 4월과 11월 총무성은 총련 관련 시설의 ‘공익성 유무 등을 엄정히 판단’하라는 통지를 전달했고, 2006년 7월 5일 이후 각 지자체는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납치 문제

경찰청 장관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납치 피해자 귀국을 위해 북한이 일본과 교섭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까지 당하다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 자금을 사건화하고 그 실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곤란해할 사건의 수

사·적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정치적·자의적으로 총련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에게 납치 문제는 지지율 획득을 위한 비장의 카드인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내세우며 헌법 개악, 교육 ‘개혁’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에 따라 요동치는 사회를 재봉합해 ‘전쟁 국가’를 완성하려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우정(우체국)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밀려난 지방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아베 정권은 ‘저항 세력’을 복당(復黨)시켜 지지율이 급락했다. 또,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율 상승을 도운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타격을 우려하는 일본 재계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한 노동 정책도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초기 63퍼센트였던 아베 정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올해 2월 중순에는 ‘지지하지 않는다’(40퍼센트)가 ‘지지한다’(37퍼센트)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납치 문제다. 같은 조사에서, 81퍼센트가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총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아베는 납치 문제 등 대북 강경 발언을 반복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 마침내 총리가 된 인물이다.

무엇보다 총련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4년 ‘핵 의혹’, 1998년 ‘대포동 소동’, 2002년 ‘9·17’[북일정상회담 —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

으로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북한 정부의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부정확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등의 시기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과 연동하는 형태로 총련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냉전 후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문제를 다뤄 왔다. 또, 일본도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다국적기업화에 대응해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쟁 국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계급을 분단하는 식민주주의와의 투쟁

그러나 총련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일본 내 좌파는 극히 소수다. 최대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오히려 납치 문제 추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총련 탄압에는 침묵하고 있다.(해방 후 공산당을 재건할 때, 재일조선인이 지대한 공헌을 했고 가장 헌신적으로 싸웠음에도 일본 공산당은 해방 후 총련 탄압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민족 학교 강제 폐쇄에 항의하는 조선인 당원을 ‘민족주의적 편향’이라고 비난했다. 1955년 총련 결성과 함께 조선인 당원이 대거 탈퇴한 것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며 일본 노동자·민중에게 조선인과 연대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일본 노동자·민중 다수는 총련 탄압에 항의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서 비롯한 불만이 북한이나 재일조선인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인이 조선인을 폭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 학교 학생 폭행 사건은 1989년 ‘빠짱꼬 의혹’, 1994년·1998년·2002

년의 시기마다 급증해 왔다. 지난해 7월 5일 미사일 발사 직후 3주 동안 1백21건,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나흘 동안에만 49건의 피해가 보고됐다. 아이치현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조선인은 죽어라!”라는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한 중학생의 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구축하고 일본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환기하려면 이런 뿌리 깊은 배외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차별에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게 아시아 식민지 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일본 내 계급 투쟁을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번역 최미선

한국인들에게 바란다 국민주의의 극복을

총련 탄압은 한국인들에게 자국 국민주의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재일조선인에 대해 기민[백성을 버리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 결탁해 유학생을 정치범으로 구속하는 등 재일조선인 운동 탄압에 손을 빌려 줬다. 그리고 한일조약을 통해 재일조선인을 분단했다. 이런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 변혁의 뜻을 품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정치 도구로 삼는 것과는 달리, 연대의 대상으로 재일조선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돼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소식 / 보고

현대차 전주공장의 직권조인 반대 투쟁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조합원들이 1·2차 잠정 합의를 부결시켰는데도, 현대차 노조 전주본부 지도부는 끝내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3월 9일 주야간 맞교대 방안을 직권조인했다. 이에 맞서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잔업거부, 특근 거부 투쟁을 벌였고, 3월 12일 오전에는 버스 공장을 점거하고 라인을 중단시켰다.

노조 지도부는 완전히 고립된 반면, 배신적 합의 반대 행동을 조직하며 과감하게 투쟁을 주도해 온 ‘주야간 맞교대 반대 실천투쟁위원회’(현장조직 민투위·자주회·동지회 공동투쟁체)가 투쟁의 구심이 됐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수요 증대에 맞춰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구실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야간 맞교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주간 연속 2교대로 고용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회사와 관련단체·우익 시민단체·지

역 언론이 한편이 돼 조합의 ‘이기주의’가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전북도지사 김완주는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과 대규모 관변 집회와 촛불 시위까지 했다.

현대차노조 전주지부 지도부는 이런 압력에 굴복해 배신적 타협을 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배신적 합의안을 거듭 부결하자, 이번에는 아예 직권조인을 해버린 것이다.

현재 ‘주야간 맞교대 반대 실천투쟁위원회’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불신임’ 서명도 조직할 계획이다.

배신적인 지도부에 맞서 아래로부터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전주공장 노동자들에게 울산·아산 공장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도 배신적 지도부를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이병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한 ‘금속노동자의 힘’ 창립

지난 3월 3~4일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현장 활동가 조직이 출범했다. 80여 명의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별 의식이 아닌 금속노동자의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을 출범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대공장 정규직 ‘현장조직’들은 정규직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해 왔다. 이는 계급적 단결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기업별 선거를 염두에 둔 기업별 의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분출하지 않는 보통 때 대공장에서 위원장에

당선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했고, 선거 공약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으로 내거는 것도 거의 금기시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창립한 ‘금속노동자의 힘’의 주축인 옛 ‘노동자의 길’은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아차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주요 선거 의제로 선동해 적잖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없는 현장조직을 건설한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힘’의 창립은 금속

산별노조의 창립과 함께 노동자 운동에 커다란 희망이 돼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동투쟁의 경험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인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건설했던 경험과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의 당면 쟁점인 한미FTA 저지와, 반전 운동, 환경 재앙과 여성 차별 등 자본주의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폐해에 맞선 정치적 투쟁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우용(기아차노조 활동가)

공무원 구조조정 강행하는 ‘부적격 정부’를 퇴출하자

최근 서울시청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계획을 내놓고,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선별해 4월부터 담배공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 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은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미 밝힌 바 있는 ‘부적격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시행계획’과 같은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퇴출해야 할 것은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뇌물 수수와 성폭력을 일삼고 정치권과 연루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 공직자이다. 정부와 구청은 이런 진정한 ‘부적격’ 공무원들은 감싸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하위직급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부 격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 축소와 각종 연금개혁, 실업 증대로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전보다 훨씬 나빠지게 만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퇴출’ 대상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국순회단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악법을 거부하고 노동3권을 위해 싸운 것은 바로 이 같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였다.

단지 공무원노조만이 아니라 공노총 등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연대도 필요하다.

이재열(공무원노조 활동가)

‘진보대연합’을 경계한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대연합’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진보대연합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먼저 정체성의 문제. 기본적으로 진보대연합은 사상적·정책적·대안적 논의라기보다는, 이합집산식의 편먹기, 판짜기 논의로 보인다. 또한 말 그대로 ‘대연합’을 짜는 이 과정에서 우선 진보라는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 “반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 등 논의 과정에서 나온 진보대

연합의 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논의가 광범해지면 광범해질수록 이런 기준은 많아질 것이고, 결국 ‘대’연합 성취에 급급하다 보면 진보라는 경계 자체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진보정치에서 더 필요한 것은 진보대연합 식의 판짜기가 아니라 ‘진보적 대안’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기성 정치인들처럼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그런 정

치 쇼’로 비칠 수도 있다.

비정규직화, 한미FTA, 중동 침략도우미, 연금법 개악, 야만적인 노동탄압 …,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성 정치의 추악함과 모순이 대중 앞에 드러났다. 이제 진보 진영은 그러한 틈을 더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대중 앞에 진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의식을 급진화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진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진보적 대안이다.

손규석

수많은 여성들이 광범한 사회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호에 실린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기사의 결론에서 “진정한 여성 해방운동은 … 더 광범한 사회운동(반전,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적극 참가해야 할 것”이고,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요구와 투쟁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과 단결해 싸우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바로 이런 투쟁에 여성 운동의 미래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좋을 듯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와 보육 정책으로 한국 여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화했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김은영

‘진보대연합’은 필요하다

배신과 개약으로 인한 열우당의 붕괴가 커다란 정치적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 공백을 메우고자 진보진영에서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진취적 도전은 가능성과 함께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손규석 동지는 가능성보다 위험에 주목해서 “진보대연합을 경계”한다.

“대연합 성취에 급급하다 보면 진보라는 경계 자체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합을 위해 진보의 경계를 흐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반한나라당 연합’을 위해 열우당과 손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과 신자유주의, 주류

정치권(한나라당, 열우당과 그 후신·변형 세력) 반대라는 분명한 원칙 속에 진보진영의 단결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원칙이 훼손될까 봐 연합을 거부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경직된 태도일 뿐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필요한 과제는 급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손규석 동지는 또, ‘진보대연합’이 “그저 그런 정치 쇼로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실컷 기층노동자·민중을 배신하고 능멸해 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벤트와 쇼를 하는 것은 주류 정당들이다.

반면 기층노동자·민중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진보

진영과 민주노동당이 선거라는 기회에 더 넓게 기층민중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정치 쇼’가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형식주의적 접근이다.

손규석 동지는 “기성 정치의 추악함과 모순이 대중 앞에 드러”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 “틈을 더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려면 손규석 동지가 말하는 “진보적 대안 제시”뿐 아니라 광범한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도전이 함께 필요하다.

전지윤

편집자: 손규석 동지가 반론을 보내시면 실어 드리겠습니다.

포럼

강원대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3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010-9840-1236

고려대
맑스는 누구인가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016-9353-5619

성균관대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016-252-4912

서울대
빈곤과 양극화, 왜 사라지지 않는가
3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011-9001-1843

시립대
오늘날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3월 21일(수) 오후 7시 문의:011-9347-1075

외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011-9937-1755

충남대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4월 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충남대 인문대
문의:011-9097-0420

지역사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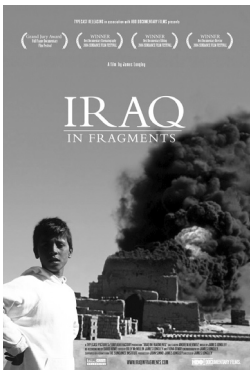
서울 서부
신자유주의를 넘어 — 민주적 참여계획경제는 가능한가?
3월 22일(목) 오후 7시 45분
장소: 토즈(신촌역 3번 출구 연대 방향 50미터)
가비: 3천 원 문의: 011-9997-9084

반전평화영화제

3월 23일~24일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

개막작
2006년 선댄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수상작
조각난 이라크
Iraq in Fragments
다큐멘터리(94분) 제임스 롱리 감독

<http://blog.naver.com/nowarfilm>



〈맛불〉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맛불〉 웹사이트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와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종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한미 FTA 저지

대중행동이 관건이다

강동훈

노무현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 한덕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덕수는 “[한미FTA를] 시간 내에 타결짓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덕수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중 마늘 협상에서 WTO가 보장하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불법 이면합의를 해 준 바 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을 기준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다.

노무현은 이 자의 ‘화려한’ 경력이 한미FTA 협상에서도 빛을 내길 바란다.

“쪽박딜”

〈조선일보〉도 “한 총리 후보는 지금이 순간부터 반FTA 세력이 일으키는 바람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역풍을 뚫고 나갈 소신과 용기”를 주문했다.

한편에서는 무역구제·자동차·섬유 등에서 미국 협상단에게 거듭 양보하며 “쪽박딜”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은 한미FTA 타결에 목을 매달고 있다.

최근 삼성 이견회는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쫓아오는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여 있다”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5~6년 후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 지배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쪽박딜”이 되더라도 반드시 한미FTA를 체결해 이 힘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지간한 규모와 강도의 반대운동이 아니면 3월 말 한미FTA 체결을 막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잠재력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점을 반영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은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만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 9명을 포함해 농촌 의원 33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비판하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력한 한미FTA 반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열우당은 “미국 정부가 우리측에 지나친 걸 요구하면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혁 ‘이미지’를 신경쓰는 김근태나 천정배 측근 의원들 중 일부는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해 공동결의문에 서명했고, 천정배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국회에서의 협정 비준동의 과정은 협상안 타결 과정 못지않

게 첩첩산중일 것”이라며 걱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3월 말 협상 타결을 강행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범국민이 계획하고 있는 3월 25일 집회가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 한미FTA 반대 운동을 대중적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록 노무현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부정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대중적 집회·행진 등이 더욱 중요하다.

계급의 용어

한미FTA 반대 운동이 주로 농민 동원에 의존했던 것을 벗어나 지금까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조직·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데 주

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용어보다는 계급의 용어로 한미FTA가 공공서비스 시장화, 환경 파괴, 약값 인상, 광우병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확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8차 협상에서 타결된 경쟁 분야의 ‘동의를명령제’ —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시정 약속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제도 — 도입으로 미국 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은 모두 혜택을 보겠지만 그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것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에서 힘을 합쳐 온 다양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폭넓은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진보 진영의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폭거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이 극에 달했다. 지난 3월 10일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러 출발하려던 버스나 트럭을 막고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전투경찰이 집회 참가단의 비행기 탑승을 막았다.

게다가 경찰은 시위대가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대포를 쏘면서 토끼몰이 식 초강경 진압을 자행하고 인도 위로 올라간 시위대를 향해 방패와 몽둥이를 계속 휘두르는가 하면 밀려 넘어진 사람들에게도 발길질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전교조 조합원은 3호선 독립문역에서 경찰 방패에 맞아 앞니 2개가 부러졌고,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광화문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 농민은 경찰 방패에 찍히는 바람에 왼쪽 귀가 찢어져 피를 흘렸다.

경찰은 체포조를 짜서, 시위대 중 한 명을 검거한 뒤 수갑을 채우고 “폭력 시위라 연행한다”며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뿐 아니라 〈한겨레〉·〈민중의 소리〉기자, 심지어 〈조선일보〉기자조차 경찰에게 맞았다.

이번 경찰 폭력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은 그에 맞선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다.